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 (Freikauf)

2005. 8

통일정세분석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2005. 8

손기웅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Freikauf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	3
III. Freikauf의 현황	5
IV. Freikauf에 의한 대동독 물자지원 현황	7
V. 평가	10
1. 정치적 평가	10
2. 경제적 평가	12

I. 문제제기

- 분단 기간 동독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정치범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음.
 -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자유왕래 및 이주권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Häftlingsfreikauf, 이하 Freikauf)는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자유롭게 이주시키기 위하여 서독정부가 외환이나 상품을 동독에 지불한 거래를 말함.
 - 서독은 Freikauf를 "특별사업"(Sondergeschäft)으로 분류하여 동독과 비공식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석방된 동독의 정치범들은 서독으로 건너와 서독시민권자가 되었음.¹⁾
- 1963년부터 시작된 Freikauf는 특히 서독 사민당(SPD)의 당수인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이 집권한 1969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통일 직전까지 지속되었음.²⁾

- 1)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음. 이주민(Übersiedler)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모든 이주자를 의미함. 이주민은 동독에 거주하던 독일인이 법적 절차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해 온 합법적 이주자들과 허가 없이 탈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성공한 이주자(Flüchtlinge, Zuwanderer)들을 포함하는 용어임. 서독정부가 동독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 정치범들도 여기에 포함됨. 한편 정주민(Aussiedler)은 구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동독 이외의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서독으로 온 독일계 이주자를 의미함.
- 2) 1962년 서독의 신교회가 교회를 통해 3대 트럭분의 칼리비료와 옥수수, 석탄 등을 동독에 공급하고 구급되어 있던 150여 명의 동독 교회관계자들을 석방해 온적이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Freikauf는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기인 1963년부터 시작되었음.

- 최초에는 사안별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 브란트 수상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란 유연한 대동독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

○ 본 고에서는 Freikauf의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해 보고자 함.

-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재결합,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표 1〉 동독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자유왕래 및 이주권리 관련

구 분	인 권 침 해 내 용
국경봉쇄·차단	국경탈출 방지장치와 차단장치 설치 그리고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격 사용 및 사살
정치적 형사처벌	동독으로부터 합법·비합법적으로 이주하려는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인 형사 처벌. 여기에 적용되는 동독 형법규정들은 불법적인 월경을 통한 공화국 도주죄, 국가·사회생활 침해죄, 불법적인 외부인사 접촉죄, 공공기관 비방 중상죄, 국가반역적인 정보·자료 유출죄, 반국가적인 선동죄, 국가반역적인 요원으로 활동죄, 간첩죄, 불고지죄, 반국가적인 인신매매죄 등. ³⁾
이주·자유왕래를 방해하는 행정적·직업상 제재	정치범의 일상생활을 통제(일정지역 체류 금지, 매일 주거장소 신고, 직장변경 및 특정인과 교제 금지 등), 특별증명서의 발행(증명서 소지자는 동구권을 포함한 외국여행 금지).
가족 재상봉 거부 및 지연	서독으로 탈출했거나, 합법적으로 이주했거나, 동독정치범이었다가 서독으로 석방된 사람들과 그 잔류가족의 재상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정치범들이 동독에서 수감될 경우 그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하고, 심한 경우에는 다른 부모들에게 입양 조치.
추방, 재입국 거부	1970년대 중반부터 체제반대자들에 대해서 의사에 반하여 서독으로 이주를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 강제로 이주신청서를 내게 하고 만약 승낙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 동독을 탈출하였거나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어 이주하였거나, 정치범으로서 서독으로 석방되어 간 자들에 대해서 재차 동독으로의 여행이나 방문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3) Amnesty International 에 따르면 1981년 한 해 동안 200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 160명이 탈출 또는 이주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II. Freikauf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

- Freikauf는 동독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서독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⁴⁾
 - 서독은 동독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회의를 통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논란을 제기하거나,
 - 비밀협상을 활용하여 특별사업을 추진하는 양면정책을 전개하여 점진적으로 동독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시도하였는 바,
 - 그 중에서 Freikauf가 핵심적인 부분이었음.

- 서독 내에서는 동독주민의 인권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동독 정부가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동독과의 협력관계를 동결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음.
 - 그러나 서독정부는 그러한 입장이 소망스럽기는 하나, 오히려 동독으로 하여금 점진적인 인권상황의 개선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독은 동독정부가 체제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권상황의 점진적인 개선을 허용하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이러한 점진적인 인권개선 전략의 연장선에서 서독정부는 내독관계성 차관을 실무책임자로 하여 동독의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상봉을

4) 동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동 조약 제2조에 국제연합헌장의 제원칙을 열거하면서 "인권의 보호"(Wahrung der Menschenrechte)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서독 측의 요청으로 삽입된 것임.

중심으로 동독 측과 비밀협상을 꾸준히 추진하였음.

- 서독측, 특히 사민당의 정치인들은 동독정부의 동독주민들에 대한 인권보장 노력이 동독정부와 주민 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 권리, 특히 이주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체제의 존립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동독 측을 설득하였음.
- 한편 동독은 정치범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동독에서는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처벌 받지 않으므로 자국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함.
 - 다만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시즘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선전을 하는 행위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동독지도부는 서독을 포함하는 서방 측이 요구하는 동독주민들의 인권보장문제를 정치·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체제의 존립문제로 간주하여 일정한 선 이상의 타협 여지를 보이지 않았음.
 - 따라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경제적 이득은 최대화 하는데 관심을 가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정부는 동독과 비밀협상을 통해 **Freikauf**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특별사업이 지속되는 한 국제적인 논란을 통해 동독의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제하였음.

III. Freikauf의 현황

- 1963년부터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Freikauf를 통해 총 34억4천만 DM이 동독 측에 제공되었으며, 그 결과 33,755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음.
 - 특별사업을 시작할 당시 동독에는 약 12,000명의 정치범이 투옥되어 있었으나, 이후 Freikauf의 결과 통일 직전에는 그 수가 약 2,000~2,500명으로 줄어들었음.

- Freikauf에 소요된 비용은 전적으로 서독 연방내독관계성의 예산으로 충당되었으며, 철저한 보안 하에 수행되었음.

- 한 명의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이 지불한 대가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1963년 사업이 시작될 초기에는 평균적으로 약 40,000 DM이었으며, 고학력 일수록 금액은 커졌음.
 - 콜(Helmut Kohl) 수상이 집권한 1982년에는 한 사람당 95,700 DM으로 대가가 증가되었으며,
 - 가족재결합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100,000 DM이 지불되었음.

- 서독은 정치범이 아닌 통상 범죄자들이 섞여서 거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음.
 - 정치범의 구금과 판결에 관한 정보는 동독의 정당, 노조, 교회, 동독 주민들의 개인적인 호소 등을 통해 입수하였음.

- 동서독간 비밀협상에서 동독 측의 창구로서는 동베를린의 변호사였던 포겔(Wolfgang Vogel)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포겔은 서독의 교회가 동독에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간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동독지도부로부터 큰 신뢰를 받은 인물임.
- 한편 서독 측에서는 내독관계성 차관이 협상의 창구였으며, 특히 레링거(Ludwig A. Rehlinger) 차관이 많은 역할을 하였음.⁵⁾

5) 그가 쓴 *Frei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en Verfolgten 1961-1989* (Berlin, 1991)은 Freikauf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음.

IV. Freikauf에 의한 대동독 물자지원 현황

- Freikauf로 합의된 물자지원의 실무는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한 독일신교연합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산하 사회구호복지기구인 Diakonie가 담당하였음.
 -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자치단체를 지원하면서 양자 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동독정부는 거액의 돈과 물품이 동독으로 반입되는 이들 간의 협력을 묵인하였기 때문임.

- 서독의 경우에도 정부가 인신매매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또한 외환을 동독에 직접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교회를 통한 물자공급방식을 선택하였음.
 - 이를 일명 "B형 교회사업"이라고 함.⁶⁾

- 석방될 정치범의 수와 대가가 확정되면 Diakonie는 서독내 5개의 회사에 위탁하여 동독이 원하는 물자를 국제시장가격으로 구매하여 동독에 공급하였음.
 - 이때 오직 물자만을 공급하였으며, 현금형식으로 지불되지는 않았음.⁷⁾
 - <표 2>는 Freikauf에 따라 "B형 교회사업"을 통해 동독에 제공된 품목을 보여줌.

6)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지원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었음. 첫째, 현물을 통한 물질적 지원 형태임. 둘째, 동독 교회지원 목적의 원자재 공급을 통한 재정이전의 형태로서 이를 "A형 교회사업"이라 일컬음. 셋째, 인도주의 목적(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원자재 이전의 형태로서 이를 "B형 교회사업"이라 함.

7) 1963년 아테나워 수상이 처음으로 32만 DM의 현금을 지불하고 8명의 정치범을 석방해왔음. 그러나 현금의 직접적인 이전은 이것이 유일한 예외였으며, 이후 서독은 물자제공의 방식을 취했음.

- 동독 측은 공급제품 결정시 1965년부터 소비제품보다는 외환절약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 예를 들어 원유, 다이아몬드, 수은, 구리, 은, 주석, 팔라듐 등을 선호하였으며, 비밀협상에서 서독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치범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가하였음.
 -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용 원자재중 국제현물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즉시 상품화될 수 있는 물자, 예를 들어 원유, 다이아몬드, 수은 등의 비중이 커졌음.

- 동독은 물자를 받으면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이를 국제시장에 되팔아 외환을 확보할 수도 있었음.

- 서독과의 Freikauf 관련 비밀협상에 관하여 동독의 국가보안성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이하 Stasi)이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하여 협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였음.
 - 더불어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한 대외무역총괄회사인 KoKo(Kommerzielle Koordination)의 당시 책임자였던 골로드코프스키(Schalck Golodkowski, Stasi의 대령으로 통독 직전에 서독으로 망명)의 증언에 의하면 늦어도 1985년 이후부터 KoKo는 동독외무성과 함께 특별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다고 함.

- 물론 호네커(Erich Honecker) 동독공산당 서기장을 포함하는 소수의 동독지도부도 정확한 현황을 보고 받고 있었음.
 - 공급받은 물자를 국제시장에 되팔아 마련된 외환의 상당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독지도층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음.

〈표 2〉 1964~1976년간 "B형 교회사업"에 의해 동독에 제공된 물자의 품목

단위: 백만 DM

품목	(상품 송장)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원유	T	-	-	-	-	-	-	-	16.9	18.3	8.0	11.5	24.0	32.1
다이아 몬드	T	-	11.8	-	-	-	7.0	7.7	22.0	10.1	4.5	8.0	12.0	10.5
구리	U	-	28	20	25.0	4.0	9.8	19.0	20.3	12.0	6.0	40.2	24.5	49.1
은	U	-	4.3	-	-	6.0	4.0	6.0	8.0	4.6	14.0	20.0	30.0	30.1
수은	T	-	-	27	-	3.5	-	3.5	2.0	4.6	1.5	2.5	7.5	8.1
질산은	U	-	-	-	-	-	-	-	1.0	7.0	-	-	-	-
주석	U	-	-	-	-	3.0	-	3.0	11.0	4.9	4.0	-	6.0	-
로듐	U	-	-	-	-	-	-	-	1.0	0.5	-	3.5	-	-
팔라듐	U	-	-	-	-	-	-	-	2.0	1.5	4.5	2.5	-	-
철광석	U	-	34.1	-	-	-	7.1	-	-	-	11.5	-	-	-
탄성 고무	T	7.1	5.1	5.0	-	-	-	-	-	-	-	-	-	-
기타 원자재		3.5	7.3	15.1	5.2	12.0	6.9	2.0	-	6.0	-	-	-	-
옥수수	U	27	-	-	-	-	-	-	-	-	-	-	-	-
커피	T	8.5	-	-	-	-	-	-	-	-	-	-	-	-
카카오 원두	T	-	-	-	1.3	-	10.0	-	-	-	-	-	-	-
버터	U	13.9	-	-	-	-	-	-	-	-	-	-	-	-
식용유	T	2.2	2.3	-	-	-	-	-	-	-	-	-	-	-
합 계		37.9	67.7	24.8	31.5	28.4	44.9	50.7	84.2	69.5	54.0	88.1	104.0	129.9

T: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내독무역이 아닌 통과무역상의 물자공급

U: 원산지가 서독으로 내독무역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물자공급

V. 평가

1. 정치적 평가

- 통일 이전에 서독 내에서는 Freikauf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하였음.
 - 즉 정치범들이 석방되어 서독으로 건너오면서 동독체제에 반대하는 비판세력의 잠재력이 약화되고,
 - 이로서 동독지도부에 주는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였음.

- 반면에 Freikauf를 통해 동독정부가 1953년 6월 17일에 일어난 민중봉기⁸⁾를 유혈로 진압한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데, 즉 동독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음.

- 한편 통일 이후에는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서독이 대가로 지불한 원자재 등 물자들이 직접 동독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쓰여졌는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는가 하는 문제가 과거청산 과정에서

8)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 동독공산당서기 겸 국가평의회(Staatsrat) 의장은 동독에 "사회주의를 계획적으로 건설"한다는 가치아래 "소련화"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권력을 강화하였음.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자산의 사회화를 통해 협동농장과 협동기업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군사화의 강화로 주민들은 내뺨을 강요당하게 됨. 또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생필품과 소비품의 부족은 주민들의 삶에 또 다른 고통을 주었음. 이에 반발하는 동독주민 100만여 명이 특히 베를린과 할레시를 중심으로 데모를 시작하였고, 동독지도부는 칼호르스트 시로 피신하여 소련군의 보호를 요청함. 1953년 6월 17일 소련군 2만명과 동독경찰 8천명이 무력으로 데모를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507명(서독측 주장, 동독측 주장은 25명)이 살해당하였음.

제기되었음.

- 이 문제제기는 서독정부의 대동독 화해정책이 동독체제의 붕괴를 지연시켰는가, 아니면 가속화시켰는가 하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 1992년 8월 28일자 "Die Zeit"지는 정치범 석방의 대가로 동독에 제공된 물자들이 동독주민들의 부족한 물자공급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권력자의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비판하였음.

- 동 기사에 의하면 제공된 물자가 동독회사 KoKo를 통해 외국에 재 판매되고 그 대금 중 수 억 DM이 호네커의 비밀구좌로 들어갔으며,
- 서독 측의 관계자들, 특히 연방내독성이나 Diakonie 담당자, 물자 공급업체 등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폭로함.⁹⁾

○ 한편 Freikauf 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독관계성 등 서독정부 측의 입장에서 찾을 수 있음.

- 동독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서독의 체제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현재의 시각만으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내독 관계에서 실체를 인정받았던 엄연한 대화의 상대로서 서독 측을 견제하고 협상에 묶어 둘 중요한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없었음.

9) 1974년부터 동독무역은행(Deutsche Handelsbank)의 호네커 서기장의 구좌번호 0628로 원자재의 재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입금되었다고 함. 호네커는 입금액 중 1년에 1억 DM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한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인 1989년 12월에 구좌잔액을 확인한 결과 서독정부가 동독에 지불한 총액의 약 1/2이 쓰이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서독은 이를 전액 회수하였다고 함.

- 서독 측은 서베를린의 서독 편입문제, 주민들의 자유왕래문제, 동독 주민들의 분단고통 완화 및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동독과 타협하고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음.
 - 특히 정치범 석방, 가족재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독에게 양보하는 것이 불가결했으므로 서독정부가 특별사업의 형식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음.
- 결국 통일 이후에 평가해 볼 때 이러한 **Freikauf**가 동독정권의 내적인 정통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체제붕괴에 일조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간과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음.

2. 경제적 평가

- **Freikauf**가 동독체제, 특히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음.
- 동독 측은 애초에 대가로 서독 측에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외환을 요구했으나, 서독은 협상을 통해 돈 대신 물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 바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된 결과였음.
 - 냉전 시 서방 측의 주요 전략은 경제적인 봉쇄정책과 아울러 동구권이 경화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던 바, 서독 또한 여기에 동참하여 내독관계에서 경화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물자를 제공하면서 **COCOM**체제에 입각하여 동독 측으로 금수품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략물자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졌음.
 - 서독 측은 아울러 물자공급을 통해 서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확보되는 효과를 노렸음.

- 그러나 제공된 물자들이 외국에 재판매되어 동독이 외환을 확보하는데
 긴요하게 쓰인 것으로 판명되었음.
 - 제공된 물자가 직접 또는 동독에서 재가공을 거쳐 제3국으로 판매되어 동독이 외환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거나,
 - 서독으로부터 물자공급이 아니었다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을 물자를 동독이 확보함으로써 외환을 절약하여 결국 외환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주었음.

- 문제는 이렇게 제공된 물자가 재판매되거나 투자되어 동독 국민경제 전체에 가시적인 도움이 되거나 동독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임.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독정부가 협상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제공된 물자의 용도를 지정하거나, 물자 사용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동독 측에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독정부의 **Freikauf** 정책이 비판될 수 있음.

- 그러나 내독관계에서 동독정부는 늘 동독주민을 담보로 협상 시 서독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또 서독에 대해 늘 독립국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독 측이 협상에서 동독 측에게 물자사용의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음.

- 또한 제공물자를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지정하고 이를 동독이 받아들였다 한들 효과 면에서 볼 때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동독체제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수 있는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었음.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압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KINU 정책연구 시리즈

-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박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Studies Series

-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통일정세분석 2005-15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 2285-0936~7
인쇄일	2005년 8월 일
발행일	2005년 8월 일
